



휴식 취하는 진객(珍客) 저어새 1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 멸종위기종 1급) 무리가 강한 바람을 피해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4·15총선 D-29... 여·야 세결집 본격화

‘정권 심판론’·‘야당 심판론’ 내걸며 총력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본격 총선체제 돌입 캠프 지원 나서
미래통합당, 경선탈락 후보 겨안는 등 기반 다지기

4·15총선 대표선수를 선발한 제주도 내 여야 정치권이 세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이후 정권교체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승리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수 있다.

여야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을 내걸고 총선승리를 위한 세결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3개 선

거구 재석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당내에도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1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엔 당시 상황과 조금 다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정치능력을 입증해 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지역 후보를 확정된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16일 총선 승리를 위해 본격 세결집에 나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

해 온 강연호·이경용·강종룡 도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도의원은 김황국·오영희 의원을 비롯해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은 후보 캠프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각 캠프진영에서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겨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승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경선을 치르며 경쟁했던 구자현·김영진 후보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고경실 후보에게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경선후보들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후보가 직접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다”며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제주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선대위에는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도내 직능단체 대표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재 각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현재 각 후보 캠프별로 나가서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며 “앞으로 도당 차원의 정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16년 만에 ‘4·3 추가진상보고서’

‘집단학살 사건’ 26건 파악
총 18개 유형으로 분류·기술
행방불명자 645명 추가 확인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16일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제1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추가진상보고서에는 4·3 당시 기준으로 12개 읍면·165개 마을(리)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기준 희생자로 확정된 1만4442명에 대해 가해자 구분, 피해 형태, 재판유형, 유해수습 여부 등에 따라 총 18개 유형으로 분류해 기술했다. 구체적인 목자는 ▷마을별 피해실태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실태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교육계 피해실태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실태 등으로 총 770쪽에 달한다.

특히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학살 사건’은 제주도 전체를 통틀어 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원을 일일이 밝혀냈으며, 단일사건 피해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학살이 이뤄졌다면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 조사 결과를



16년 만에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보낸 현재 4·3위원회가 확정된 3610명에서 64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진상조사에서는 2261명에 이르는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 이중 경인·호남지역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예비검속 피해 조사에서 희생자 566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유해발굴 40명, 구금중이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된 13명 등 총 53명의 행적만 확인됐고, 나머지 513명의 신원과 행적은 아직 미연한 상태다.

교육계의 4·3 피해에서는 교원 271명, 학생 429명 등 총 700명의 인적피해와 93개 학교의 교육시설 및 학교운영 손실 등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송은범기자

‘여성안심 3중세트 지원사업’ 시범 추진

도, 수행단체 27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여성안심 3중세트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여성안심 3중세트 지원사업’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도난,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여성 1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는 도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rhdcnjf@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 사업장 휴업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확대 지원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대형 여행사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련 업체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여행사 등 관광운송업, 공연업 관련 모든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90%까지(1일 지원한도 7만원)를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지급한다.

다른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현

행과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의 2/3까지, 하루 6만6000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고용·산재·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들 사업장의 재직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이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가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부미연기자

>> 기획 / 7면... 제주의 자존 한라산을 말하다 <1>프롤로그

SINCE 1989
창간 31주년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시선으로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차원 높은 정보와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한라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제주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여성기업
DESIGN leader
JEJU 디자인리더 제주

여성기업
DESIGN leader
JEJU 디자인리더 제주